

과거사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제도의 형성 그리고 기념공간: 5·18민중항쟁을 중심으로*

정 호 기**

과거사 청산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사회화하는 현실적 방안의 모색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고하게 한다. 이 글은 과거사 청산에서 교육에 대한 안목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맥락과 과정을 통해 구조화 및 제도화되었는가를 주체의 인식과 제도의 형성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과거사를 주제로 한 기념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대표 담론 및 의례의 표상에 관철된 교육의 현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5·18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5·18의 청산 작업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것은 비 제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5·18교육이 제도의 영역으로 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다. 5·18교육을 주관한 주요 주체는 5·18기념재단과 대학인데, 일정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발전해왔다.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념공간들은 5·18교육에 대한 안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 및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5·18기념공간들은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했고, 이는 시설의 보완과 신축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측면에서 5·18묘지의 대표 담론과 참배문화를 고찰하면, 제도화와 국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과거사 청산, 5·18민중항쟁, 교육, 제도, 기념공간

* 이 논문은 2010년 8월 11~12일 동북아역사재단, 중앙박물관, 고려대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재)5·18기념재단 관계자분들과 고재대님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1. 머리말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근현대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재평가하고, 이 사건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기념 혹은 추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과거청산(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또는 과거사 청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도의 차원에서는 점차 일단락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의 활동 결과가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미완의 과제들을 수없이 남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과거사 청산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심어 준 많은 교훈과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효과들을 희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와 역사라는 것이 통제된 구성물이며,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된 무수한 사실들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고,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과거사 청산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위해 이를 되돌아보니, 미흡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상흔의 치유는 대중요법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상흔을 악화시키거나 고질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축적된 과거사 청산의 경험과 긍정적 유산이 미흡함을 알게 되면서 해외의 사례들로 시야가 확대되었다. 5·18민중항쟁(이하 5·18)의 기념사업이 본격화되던 시점이 아마도 이러한 흐름의 초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¹⁾ 이후 5·18특별법 제정운동이 확산되면서 기념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진행된 다양한 과거사 청산 사례들이 국내에 소개되었다.²⁾ 과거사 청산 대상과 수준이 점점 고양되는

¹⁾ 1994년에 전남일보사가 발간했던 『5·18광주기념사업을 위한 세계 민주 성지를 가다』가 이러한 활동의 초기에 해당한다.

것과 비례하여 해외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차용하려는 활동들도 더욱 활발해졌다. 2000년대에 들어 민주화운동 전반과 인권 유린 및 침해, 전쟁 전후기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 등에 관한 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이 사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는데,³⁾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사례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이용우 2007; 최호근 2005; 2009). 또한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 위치한 국가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들도 소개되었다(안병직 외 2005, 김영수 2008). 그리고 비교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과거사 청산들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기도 했다(이내영·박은홍 2004).

해외의 사례들에 대한 관심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되었다.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 등도 과거사 청산의 주요 과제들이지만, 이에 대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과거사 청산의 쟁점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해외의 과거사 청산들은 국가별 정치·사회적 조건 및 환경, 사건의 특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활동 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이 재구성된 과거의 진상들을 기억해주고, 성찰적으로 대화해주시기를 희망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었다(LaCapra 2008). 이것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이 원활하게 작동’(김영범 2010, 230-276)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사회적 기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장치가 필요했다(양호환 2010, 5-6). 특히 문화적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는데, ‘기억의 문화(cultural of memory)’로 정의되었다. 기억의

2) 박원순의 연구들(1993; 1994; 1995; 1996)이 두드러지며, 구승희의 연구(1993), 장수환의 연구(1994), 정현백의 연구(1996)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3) 이러한 활동의 결과들이 한국의 과거청산에 어떻게 수용 및 반영되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추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주제이다.

문화는 기억에 대한 선택과 배제, 선별과 구성 그리고 재구성과 권력화 등을 경과하면서 형성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전진성 2005, 94-99;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의 산물들이 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교육’이 재고되어야 했다. 교육은 제도와 다양한 종류의 공간과 시설 그리고 교재 등을 필요로 했고(Cohen 2009, 465-503), 이러한 환경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교육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교육은 과거사의 전승과 담론의 확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작업을 필요로 했다(Bourdieu & Passeron 2000, 55). 이것은 과거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허시(H. Hirsch)가 우려했던 것처럼, 과거사 청산의 과정과 성과가 제도의 영역에서 편재 혹은 재편성되어 교육 및 기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교육 내용’이 국가와 지배체제에 따라 왜곡, 수단,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했다(Asmann 2003, 117; Hirsch 2009, 182, 198; 김유경 2002, 405). 이러한 점들에 무지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제도의 권위와 힘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과거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정착되어갔다.

오늘날 제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의 결과물들에는 국가 혹은 과거사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기구들에게 ‘역사 기억과 교육을 수행하라’는 권고문이 관례처럼 수록되고 있다. 이는 과거사 청산의 사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숙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기억의 문화에서,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정착된 교육에 대한 안목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맥락과 과정을 통해 구조화 및 제도화되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역점을 두고 살펴볼 점들은 첫째 5

· 18교육에 관한 장의 변화와 필요성 인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체의 형성과 이들의 활동이며, 둘째 기념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대표 담론 및 의례의 표상에 관철된 교육의 현재성이다.⁴⁾ 5·18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 작업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 글은 과거사와 관련하여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구조와 체제의 단초가 5·18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정리 및 고찰하는데 의미를 두었다.⁵⁾

2. 5·18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주체의 형성 그리고 역할

1) 5월운동을 위한 5·18교육

5·18교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쟁점으로 전개되었던 ‘5월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5월운동은 과거와 현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쟁점과 과제 그리고 실천의 혼합체였다. 따라서 5월운동과 사회운동은 한동안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었다.

4)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지식과 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되거나 전수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일정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로 그 의미를 국한한다.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양호환 외(2009) 참조. 5·18을 주제로 한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은 ‘역사’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고찰하는 5·18기념공간은 주로 5·18묘지로 국한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설과 집합행동으로 한정 지었다. 5·18묘지는 국립5·18묘지에서 국립5·18민중묘지로 그 명칭이 바뀌어왔으나, 이 글에서는 ‘5·18묘지’로만 표기했다.

5) 이 글은 그 동안 미흡했던 5·18교육에 관한 필요성과 구조의 형성 그리고 제도화를 살펴보는 주안점을 두었다. 5·18교육의 목적과 주체의 변화, 교육을 쟁점으로 한 국가와 사회관계, 교육의 내용과 담론의 구성, 교육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겼다.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 또는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라면, 5·18에 대한 반국가적 성찰과 재인식을 위한 사실의 고찰 및 인식론적 사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조희연 2009, 274-279).

가장 극적으로 5·18교육이 이루어졌던 방법은 ‘자살’이었다. 1980년 5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서강대학교 김의기 학생의 투신자살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5·18의 진상규명을 주장했다(나간채 2008, 212-218). 죽음을 통한 5월운동이 개인 차원의 극한적 항거였다면, 집단적 항거는 5·18에 책임이 있는 각종 기관이나 건물의 점거와 공격으로 나타났다(정근식 2005). 이들의 죽음과 활동이 갖는 의미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방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국가의 규제와 통제로 이는 번번이 좌절되었고, 기껏해야 간단한 사건으로 또는 왜곡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공적인 전달매체들에서 배제된 소식들은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소문과 전언 그리고 소모임 등을 매개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5·18교육은 국가가 전유한 5·18 담론에 균열을 촉진시켰고, 5·18의 실체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5·18교육이 보다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것은 다종의 집회와 시위 그리고 해마다 재현되었던 추모행사 등이었다. 이 집행행동들은 참여자와 관찰자 그리고 간접적 정보 수용자들에게 5·18에 관한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집합행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반정부 유인물들이 배포되었는데, 다수가 5·18의 진상과 운동의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박현채·조희연 편 1989). 또한 5·18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소책자들도 발간되었다. 소책자들은 주로 운동권 내에서는

밀하게 유통 및 탐독되었고, 훌륭한 교재로 활용되었다(이재현 1991, 146).⁶⁾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책자들도 제작 및 배포되었다. 비록 불충분한 내용과 구성이었으나, 비 제도권 내에서 5·18교육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안종철 2001). 당시에 배포된 다종의 유인물, 소책자, 그리고 자료집들에는 오류들이 없지 않았으나, 보다 사실에 근접한 5·18을 알리는 욕구를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5·18을 주제로 하는 도서들이 대량으로 발간되었다. 초기에 발간된 도서들은 금서로 분류되어 유통과 판매가 불법화되었다.⁷⁾ 그럼에도 이 책자들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이 책자들의 탐독은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5·18에 관한 도서의 소지 및 탐독과 학습 행위가 시국사범들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비공식적으로 또는 비밀스럽게 5·18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적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

6월항쟁 이후 비제도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5·18교육에 대한 규제들은 점차 소멸되었다. 전두환 정부가 노태우를 통해 5·18의 제도 내 포섭 계획을 표명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그런데 이는 1980년 5·18 그 자체에 국한한 것이고, 5·18의 사회운동적 해석과 전유는 엄격한 통제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금기들은 잔존했으나, 비제도

6) 이재현은 학생운동 집단들 내의 5·18에 대한 정서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80년대는 광주항쟁의 피바다로부터 시작된다. 광주항쟁에 관해서는 일단 소문으로, 그리고 조금 뒤에 김준태의 시가 실린 타자본이 돌아다녔다. ‘남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8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을 이해할 수 없다(이재현 1991).”

7) 대표적인 예가 1985년에 발간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등이다. 이 책의 발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유시춘 외(2005, 38-4)를 참조.

영역에서의 5·18교육은 붓물을 이루었다. 이제 시민들도 공공연하게 5·18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다종의 5·18도서들을 비롯해 각종 매체들이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5·18 사진첩과 비디오테이프 등이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이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교재였다(정근식 2007, 110). 또한 시민적 관점에서 제작된 5·18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면서 5·18교육의 대중화가 확산되었다. 5·18에 관한 사회구성원들의 학습 욕구는 더욱 증가하여 사건 현장의 방문과 망월묘지 참배가 사회운동의 중요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5·18에 관한 보다 생생한 내용을 접하기 위해 참여자나 유족 등을 초청한 강연회나 증언대회가 전국에서 개최되었다.

1988년에 개최된 ‘광주청문회’는 5·18교육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장이었다.⁸⁾ 5·18의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이 국회에 호출되어 진상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5·18교육의 효과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와 대비적으로 5·18보상법 제정 이전부터 시작된 피해보상, 3당 합당, 5월행사의 합법화 등은 비제도 영역에서의 5·18교육의 장과 기능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5월운동과 사회운동이 역점을 둔 활동 목적과 방법 등이 격차를 드러내고, 이것이 확대되면서, 비제도 영역에서의 5·18교육의 필요성과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따라서 5·18교육은 비제도 영역에서 제도 영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⁸⁾ 광주청문회는 1988년 11월 18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총19회 개최되었고, 증인 70명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2회에 걸친 증인 참석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1989년 12월 30일에 ‘불출석의 죄와 국회모역의 죄’로 고발되었고, 출금금지가 요청되었다.

2) 5·18교육의 제도화와 주체

5·18교육의 제도화는 주체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법률에 근거하여 혹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받아 운영하는 (준)공적기관들이 주체가 된 경우이다. 5·18기념재단(이하 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같은 공교육 기관들이 주체가 된 경우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5·18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재단과 대학이 5·18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1) 5·18기념재단과 5·18교육

1994년 8월 30일에 출범한 재단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국에서 창립된 첫 재단법인이다. 창립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재단의 설립 목적은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시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⁹⁾ 학술·연구·문화사업과 교육 사업을 별개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통은 교육 사업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단이 출범할 당시에는 교육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5월운동의 주요 의제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재단의 5·18교육은 부서의 업무 구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업 혹은 행사로 살펴보면 1996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업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강의, 토론, 글쓰기 그리고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사업은 망월묘역의 환경 정리와 안내

⁹⁾ 이는 재단의 정관에서도 확인되는데,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장학사업’ 등만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했다.

등 봉사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5·18기념재단 2004, 23-24). 그러던 가운데 5·18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고시키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5·18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1997. 4.), 국가기념일 제정과 5·18묘지 완공(1997. 5.),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1997. 12.) 등이 그 예들이다. 이 사례들은 5·18의 청산이 제도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재단은 1997년에 진실조사, 기념사업, 정신계승사업 등으로 조직과 사업을 재편했다(5·18기념재단 1998, 96). 정신계승사업과 교육 사업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교육이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재단의 교육 사업은 프로그램의 운영 중심에서 교재 및 자료의 발간으로 다소 중심을 이동했다. 초·중등학생용 소책자 발간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1998년 하반기에 구체화되었는데, 이사 1인과 추천 교사 2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 역사적 의의, 정신의 실천 방법 등을 수록한 『생활 속의 5·18민중항쟁(가제)』을 다음 해 상반기에 발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책의 배포 대상은 5·18묘지와 5·18사적지들을 단체 방문하는 학생들(초등학교 3-6학년)이었다(5·18기념재단 1998, 105). 이 외에도 교육 사업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기획되었으나,¹⁰⁾ 어느 것도 실행되지는 못했다(5·18기념재단 1999, 22).

교육의 관점에서 기념공간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던 것도 이 즈음이었다. 5·18묘지는 완공 직후부터 5·18의 진상과 5월운동의 내용을

¹⁰⁾ 1998년에는 5·18사진첩, 비디오, CD제작 계획도 수립되었다. CD는 위 사진첩, 비디오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설명 문안은 초등학생용, 중고생용, 일반용으로 구분·제작하여 교육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5·18기념재단 1998, 101). 이것은 5·18묘지에 수학여행단의 방문이 확대될 것임을 고려하여 준비되었다. 재단은 이 책자들을 문교부와 행정 기관, 도서관에 판매한다는 활용 계획도 갖고 있었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¹¹⁾ 재단은 ‘전시실’을 설치하여 이 문제를 완화시키려 했다. 전시실은 1998년 5월행사에 맞추어 개관했다. 이것은 5·18자유공원 내의 전시실보다 1여 년 앞선 것이었다. 사업계획안에는 ‘임시 사진 전시실’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전시실의 존속 시한을 추가 시설로 논의되던 ‘유물전시관’ 건립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이었다.

보다 체계화되고 다양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실행되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현장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고, 주요 대상은 청소년이었다.¹²⁾ 비제도 영역에서의 5·18교육이 성인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준제도 또는 제도 영역에서의 5·18교육은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의 5·18기념공간 방문은 수행여행, 테마학습, 현장학습 등에 의해 증가하고 있었다. 5·18묘지묘만 보면, 당시 참배객의 약40%가 청소년들이었다. 그리하여 ‘5·18묘지, 자유공원, 기념공원 그리고 주요 사적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5·18기념재단 1999, 127-131). 재단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¹³⁾ 5·18자유공원의 강당, 공원 내의 영창과 법정 그리고 5·18묘지와 5·18기념공원 등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5·

11) 전시실의 설치 목적은 “5·18묘지에 5·18유물전시관이 건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묘지 참배객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할 아무런 시설물이 없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물을 이용하여 참배객들의 5·18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5·18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전시실은 유물전시관 건립이 지연되면서 2000년에 보완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보완된 것은 외국인을 위한 설명문의 제작 및 부착, 사진의 노후화 대비, 조명 등 시설물 또는 음향 시설, 기타 시설 유지 보수였다(5·18기념재단 2000, 117).

12) ‘5·18 소재 글쓰기 현상공모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체험학교, 역사교실 운영사업 등에 관한 계획이 입안되었다.

13) 전국 중·고교 국사·사회교과 담당 교사 초청 설명회, 전국 중·고교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추진 계획, 5·18역사캠프 운영 사업 추진 계획, 우리 고장 우리 역사 학교 운영 사업 계획 등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다.

18안내 가이드 육성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렇지만 이 계획들 가운데 실현된 것은 극히 일부였다.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공교육 내로 5·18교육을 편입시키고 제도화하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2001년에 구성된 ‘5·18민중항쟁 청소년교육위원회’는 이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사례였다. 이 위원회는 『5·18민중항쟁 공교육 방안모색 공청회』를 개최(9. 27)하여 이 의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¹⁴⁾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진행한 이 공청회는 중·고등학생이 주 대상이었다.¹⁵⁾ 이 논의가 진행될 무렵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간한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광주의 생활』과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5·18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김효석 2001, 12).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의 정비 및 구조의 정착과 더불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훈련 및 역할이 중요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과 교사집단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중등 교원들은 5·18에 관한 제도 교육의 필요성을 대학 교원보다 빨리 인지했다(이효춘 2007). 교사들은 5·18묘지가 조성된 직후부터 5·18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나, 이를 공교육 내로 편입시키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2001년에 전국 중·고등학교 역사·사회교사 연수를 실시한 것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5·18교육의 필요성과 사업들은 제4대 이사회의 출범(2001. 10.)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 제5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재단의 운영에 관한 원칙과 사업 방안을 밝히면서 ‘청소년·교육 사업의 집중을 통한 5·18정신의 미래 가치 정립’을 사업의 주요 목표들 가운데

14) 『시민의 소리』, “5월항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2001.9.28.

15) 재단, 전교조 광주시지부, 5·18연구소, 5·18시민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재단이 이를 위한 활동의 장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로 제시했다(5·18기념재단 2002, 179).¹⁶⁾ 이를 위해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연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강화, 공교육에서의 5·18교육 활성화 추진 등을 구체적인 사업들로 선정했다. 이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광주민중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1. 12. 21)되었다. 이 법률은 5·18이 제도에 의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 및 전승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제도 내 5·18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02년에는 5·18교육으로 범주할 수 있는 사업들이 11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다.¹⁷⁾ 그렇지만 2003년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원칙들 가운데 하나가 ‘5월 관련 자료의 체계화 및 청소년 사업의 내실화’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5·18기념재단 2003, 152), 다수가 착근하지 못했다. 11개의 교육 사업들 가운데 계속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는 청소년교육위원회 운영,¹⁸⁾ 교사연구 사업, 청소년을 위한 략2002 정도에 불과했다. 2003년 교육 사업에는 청소년 인권평화학교(민주화운동기념

16) 재단은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을 지원받으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이때 재단은 4가지 사업들을 선별했는데, 5·18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업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2001년과 2002년의 사업 방향들이 결정되었는데, 첫째, 5·18민중항쟁에 대한 청소년 교육과 공교육에서의 5·18교육의 활성화, 둘째, 5·18민중항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연대사업의 성과, 셋째, 5·18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 넷째, 5·18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기초조사 등이었다(5·18기념재단 2002, 180).

17) 5·18영상물 제작, 청소년교육연구팀 운영, 5·18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시민강좌, 중고교 5·18체험프로그램 지원(5·18특별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2002년 시작)), 교육용 교재 제작 및 개발, 전국역사교사모임 광주연수, 광주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전국 교사연수, 5·18민중항쟁 22주년 기념 청소년사업, 예비졸업생(중3, 고3) 5·18체험학교, 청소년교육 활성화 지원, 5·18기념공원 청소년축제 및 프로그램 발표 한마당 등이었다.

18) 청소년교육연구팀은 교사 5명으로 2002년에 출범했다(이효춘 2007, 69). 재단은 학교 교육(교재, 교사연수)에 어느 정도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2003년에는 인원의 폭을 다양화하여 5·18 및 민주·인권·평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교과별, 내용별, 과제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청소년교육연구팀은 발전적 해체를 한 후 사업부 산하에 “청소년교육위원회”로 편성되었다(5·18기념재단 2003, 171).

사업회와 공동 주관), 광주 평화캠프사업이 추가되었다.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동안 기획되었던 교육 사업들의 실행과 착근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재단은 2003-2004년에 수행한 청소년 교육 사업을 토대로 하여 『5·18청소년교육사업의 평가와 제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5·18기념재단 2004).

시행착오와 부침을 한 결과, 2010년 현재 재단이 진행하는 교육 사업¹⁹⁾은 5·18교육네트워크, 5·18교육활동지원, 5·18교육대토론회, 전국고등학생토론회, 5·18청소년문화제, 사적지 안내 및 체험학습 운영, 5·18아카데미, 교육자료 발간, 5·18시민강좌, 교사연수, 오월강사단 운영 등 11개이다(5·18기념재단 2010, 3).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5·18교육은 대상에 따라 크게 청소년, 일반 시민, 교사로 그 범주를 특정화했다. 5·18교육 사업의 주요 대상은 여전히 청소년이지만, 초반과 비교하면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5·18이 발발한지 30년이 경과하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시민의 인지도도 낮아졌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었던 것이다.

재단은 5·18교육이 활성화되자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재 발간을 추진했다. 2004년에 발간된 『선생님이 들려주는 5월 이야기』가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5·18 장학자료’로 인정을 받고,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되었다.²⁰⁾ 5·18교재 발간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2005-2006년에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이라는 제목으로 5종의 수업모형을 개발했다.²¹⁾ 5·18교육을 위한 교재는 더욱 체계화 및 다양화되어

19) 재단이 근래에 주관한 5·18교육 사업에 대한 정리와 평가는 김남철(2010)을 참조.

20) 5·18에 관한 최초의 장학자료는 2004년 3월 11일에 발간되었다. 이 자료는 5·18의 성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 312쪽 분량이며, CD로도 제작되었다. 『무등일보』, 2004.3.12.

갔다. 2008년에는 5·18을 주제로 하는 초·중등교육 교과서의 발간이 이루어졌다.²¹⁾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8년 12월에 이 교과서들을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 인정교과서로 승인했다.

한편 공교육 체제 내에서 수행되는 5·18교육의 일면은 『한국근·현대사』라는 고등학교 교과목과 교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 발간된 한 교과서를 살펴보면(김광남 외 2009), 5·18에 직접 해당하는 부분은 너넉잡아 2쪽 분량이었다. 4·19혁명을 기록한 부분이 7~8쪽, 1970년대 노동운동에 관한 부분이 약 4쪽, 1987년 6월민주항쟁에 관한 부분이 약 2쪽임을 감안하면, 제도교육 내에서 5·18교육의 위상과 의미 부여가 생각보다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대학에서의 5·18교육

5·18을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에서는 5·18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과목 혹은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었다. 한국 현대사, 사회운동론, 한국사회론, 민주주의론 등이 대표적인데,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5·18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5·18교육은 오래 전부터 대학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강좌들은 다양한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 혹은 집합행동들을 예시하거나 고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5·18에 관한 최소 수준에서 수업이 진행된 것이지, 적절한 수준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5·18교육이 공교육에서 일회성이 아닌, 정식 강좌로 개설된 것은 수년에 불과하다. 5·18교육은 5·18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대학들

21) 2005년에는 역사, 미술, 클럽 활동에 관한 교재가, 2006년에는 도덕과 초등용 교재가 발간되었다.

22) 정남석 외(2008)와 장용준 외(2008)를 발간했다.

에서 먼저 수행되었다. 대학에 강좌의 개설을 통한 5·18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준비가 표면화된 것은 2002년이였다. 이는 광주광역시시의 후원을 받아 전남대 5·18연구소에서 주관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전남대 평생교육원과 교양과목으로 각각 5·18강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하는 것이었다.²³⁾ 그리하여 5·18에 관한 여러 주제들을 수록한 첫 대학 교재인 『5·18항쟁의 이해』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5·18의 발발 배경, 전개과정, 5월운동, 광주청문회와 재판, 기념사업 등을 소주제로 수록했다. 그러나 이 책을 활용할 강좌가 개설되지 않았다. 교재는 출간되었지만, 발간 취지와 목적을 실현할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지 못함에 따라, 유관 강좌들에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교재의 발행처가 일반 출판사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였다라는 점도 대중화를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대학에서 5·18에 관한 정규 과목이 개설된 것은 2005년이였다. 전남대는 2005년 1학기부터 ‘5·18항쟁과 민주·인권’이라는 제목의 강좌를, 조선대에서는 2005년 2학기부터 ‘광주항쟁과 민주사회’라는 제목의 강좌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했다(최영태 2010, 598). 강의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5·18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고, 이를 위해 2008년에 『5·18 그리고 역사』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3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5·18에 관한 종합 안내서라는 취지도 갖고 있었다. 이 책에는 약 5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5·18 이후에 전개된 5월운동과 5·18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 문화·예술적 측면에서의 5·18, 그리고 5·18에 대한 철학적 이해 등에 관한 주제들을 보다 강조하여 수록하고 있다.

²³⁾ 광주광역시 5·18지원협력관실, 『제115회 시의회 임시회 -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2.7).

3. 기념공간의 구성과 운영에 투영된 교육의 안목

1) 구상과 조성 과정에서의 교육의 안목 : 집중형

5·18기념공간의 조성은 1985년 5월의례와 행사를 준비하던 시민사회의 구상에서 발단이 되었다. 이 구상은 정부의 탄압으로 좌절되었으나, 5·18의 피해 치유를 위한 여러 과제들 가운데 하나를 제시했다. 6월항쟁 이후, 5·18기념공간의 조성은 국가가 추진 주체가 되었는데, 망월묘역을 대신할 새로운 집단묘지의 조성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신군부의 일원이자 5·18의 핵심 책임자였던 노태우 정부에서 성사될 수 없었다. 새로운 집단묘지의 조성은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가능했는데, 1994년 11월 1일에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5·18묘지의 조성 목적, 주체, 내용 등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 그리고 강제와 합의가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의 공간적 재현에서 등장할 수 있는 상당수의 의제들이 표출되었다. 이것은 기념공간의 개념과 구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제도화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 글의 문제의식에서 보면, 노태우 정부 시기의 5·18기념사업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최소한의 조건부 추모였고, 방법은 5·18묘지의 조성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교육의 안목이 자리할 여지가 없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기념관 건립을 공식화하면서였다. 그러나 이 공간의 구성과 운영 및 활용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가가 주도하던 5·18묘지의 조성엔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것은 1993년 12월이었다. 이후 1994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5·18묘지의 조성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쟁이, 12월 이후부터는 사업의 주체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관한 논쟁

이 벌어졌다. 시민사회의 주장은 ‘5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²⁴⁾의 주도로 1994년 4월 15일에 공식화되었다. 이 단체가 제시한 ‘기본 견해’는 망월모지와 전남도청 그리고 상무대를 정점으로 5·18기념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5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1994, 77). 이 시안은 약 1달 후인 5월 12일에 발표된 『5월 성역화사업의 마스터플랜』에서 보다 정식화되어 제시되었다. 이때 전남도청 및 그 일대의 광장을 ‘민중항쟁의 역사 속에서 5·18의 현재적 의미 해석, 연구 및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교육의 안목이 처음 표방되었다. 마스터플랜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전남도청의 기념공간에 5·18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역사연구소, 기념관, 도서관, 회의실, 전시장, 공연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연구 및 교육 공간을 의미화 했다.

기념공간의 조성에서 교육은 어느 곳이든 항상 기본으로 사고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안은 세 개의 공간들 가운데 전남도청에만 교육의 기능을 배치한 ‘집중형’으로 구상되었다. 즉 전남도청을 ‘교육 학습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교육을 선택적 안목으로 파악했음을 뜻했다. 이는 기념공간의 개념 구상에서 교육이 협의로 인지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의견과 대안은 1995년에 수립된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대체로 수렴되었다. 종합계획의 구상은 이후 기념공간들과 시설들의 조성 및 건립 그리고 배치 및 내용 등의 근간

²⁴⁾ 이 단체는 위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994년 1월 12일에 결성되었다. 13개 시민단체와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결성취지문에서 ‘역사와 후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으나, 시민의 여론을 반영한 종합적 5·18기념사업의 추진이 주요했다.

이 되었다.²⁵⁾ 여기에서 밝힌 ‘과업의 목적’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5·18의 정신을 후세에 길이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5·18묘지성역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전남도청과 상무대의 기념사업과 유적·유물 보존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5·18묘지의 공간 개념과 내용 구성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망자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새로운 집단묘지를 조성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고, 이를 추진할 주체와 방법 그리고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시민단체가 정부안에 대립각을 세웠던 점들은 현장 보존, 저예산과 효율성, 최소 규모, 공간에 민주주의의 원리 반영 등이었다. 이와 같이 5·18묘지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구상에서 교육은 의미를 두고 고려되지 않았다.

5·18묘지의 조성에서 교육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전남도청 일대의 기념공간에서 이를 구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여러 이유로 지연되었고, 교육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과 공간들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강당과 공연장 그리고 전시실 등의 시설들을 구비한 5·18기념공원과 5·18자유공원이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교육의 안목은 이 공간들의 조성에도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방문객이 가장 많은 5·18묘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들은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과 교육의 안목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동일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²⁵⁾ 『5·18기념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종합보고서』(1996)에서도 교육의 안목은 반영되지 않았다.

2) 운영과 활용에서의 교육의 안목 : 분산형

5·18기념공간들이 교육의 안목과 기능을 배제하고 조성되면서 공간의 운영과 활용에서 즉시 많은 문제들이 표출되었다. 5·18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적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방문객들의 평가는 이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이것은 기념공간을 조성한 주요 목적인 5·18 진상의 공유와 정신 및 의의의 계승에 명백한 제약 요소들이었다. 보고 느낄 내용의 빈곤은 점진적으로 방문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5·18묘지 조성 당시에 교육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7개 주제의 부조들로 구성된 된 역사마당과 외부 전시물들이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의 일부를 제외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재단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에 5·18묘지 내 ‘역사의 문’ 지하에 전시실을 만들었다. 전시실은 5·18 당시 사진들과 평면 게시물 그리고 영상물 상영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전시실은 5·18묘지 방문객들의 동선에도 변화를 가져와 역사마당으로 발걸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실의 개관은 임시방편이었고, 교육과 볼거리를 제공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광주광역시시는 이를 수용하여 2002년에 ‘유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전남도청에 기념관을 비롯해 다수의 관련 시설들의 조성이 유효한 것이어서, 유물관은 망월묘지를 이장할 때 출토된 유품(38종 170점)과 관련 자료의 전시를 목적으로 했다. 이것은 교육 시설과 매체의 결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산 확보의 난항과 관리 기관의 변경(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처로) 등으로 지연

되었고, 전시실의 존속은 계속 연장되었다.

5·18묘지가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2004년과 2006년의 학술연구용역보고서들에서도 언급되었다. 2004년의 보고서에서는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추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광주광역시 2004, 17). 2006년의 보고서는 5·18묘지의 시급한 해결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는데, ‘시민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응답률이 41.5%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크게 높았다고 했다. 그리고 5·18묘지의 시급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항목에서도 ‘민주·인권·평화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42.5%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국가보훈처 2006, 57-58). 두 보고서들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행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²⁶⁾

5·18교육을 위해서는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이를 담아낼 시설들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유물관’ 건립이 다시 조명을 받았다. 그런데 유물관 건립은 다른 5·18기념사업들과 연동되어 후순위로 미뤄졌고, 활용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부각되었다. 장기간 표류하던 유물관 건립은 참배객과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관 혹은 전시실 건립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전남도청에 건립될 기념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념관과 유사한, 사실상 차이가 없는 ‘추모관’ 건립으로 전환된 것이다. 2007년에 추모관이 개관하면서 기존의 전시실은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재 조성되었다. 5·18묘지 방문객들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수를 구성하지만, 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반영했던 것이

²⁶⁾ 광주광역시(2004)는 ‘구묘역과 신묘역을 정비하고 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하라고 지적했다(17). 국가보훈처(2006)는 ‘시민사회단체와 폭넓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58-159).

다. 그렇지만 이 공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들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5·18묘지는 조성 이후 10여 년 동안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을 추가하고 보완했다. 그렇지만 5·18묘지의 교육적 기능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추모관과 체험공간 등의 조성으로 교육 환경이 개선된 것과 대비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외부 행사들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5·18묘지에서 직접 5·18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연구자 그리고 프로그램 전문 운영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수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18교육이 가장 많이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5·18기념공원 내 5·18기념문화관이다. 이는 재단을 비롯하여 5·18 관련단체들 그리고 관리사무소 등이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재단이 5·18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5·18기념공원이 교육공간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간은 행사와 회의 등 다중의 집회 시설로 구상된 것이어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기에는 제약 요소들이 많다. 한편 5·18기념공원 내에는 2001년 9월에 개관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되어 있다. 5·18기념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건물은 구성 요소가 아니었으나, 5·18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피해를 염두에 두어 장소가 제공되었다. 이 건물은 복합교육문화시설로 건립되었으나, 5·18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5·18교육에는 활용될 수 없었다.

5·18기념공원이 교육공간으로 재성찰된 것은 2007년에 이루어진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이 계획서는 “현재 5·18기념문화관

자체 기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라고 평가하고, 여러 가지 대안 프로그램들을 제시했다(5·18기념재단 2007, 84). 엄밀히 말하면,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5·18 기념문화관을 이용해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 주체인 광주광역시도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교육의 안목이 부재했던 것은 5·18자유공원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현장 보존의 필요성이 뒤늦게 공감을 얻어 조성된 공간이지만, 대다수가 신축된 시설들이다. 자유공원은 완공될 때 전시실을 갖추었고, 소규모 강연장이 있었으나, 운영프로그램과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영창과 법정 및 내부반 등과 같은 군대의 재현시설들이 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다. 이로 인해 5·18자유공원은 이벤트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는 사람이 찾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해갔다.²⁷⁾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학술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보고서는 5·18자유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연수관’ 건립에 초점을 맞추어졌다. 연수관 건립은 5·18교육 공간의 필요성을 5·18자유공원에서 해소한 것이다. 연수관은 강의실이나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 및 후생실과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핵심은 “숙박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5·18기념재단 2006). 숙박시설은 5·18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혹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능이었다.

마침내 2010년 7월에 ‘교육관’이 5·18자유공원 내에 완공되었다. ‘연수관’으로 계획되었으나, ‘교육관’으로 호명되었다. 사업계획이 구

²⁷⁾ 이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2004, 17)와 5·18기념재단(2006, 3)을 참조 바람.

체화 되고, 완공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실제 교육관 건립이 이루어진 것은 반년에 불과했다.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 그리고 5·18관련단체들이 장소 선정을 두고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1년 6개월을 보냈던 것이다.²⁸⁾ 교육관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것은 예산 불용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라는 압박이었다.²⁹⁾ 그리하여 교육관은 숙박시설은 배제하고, 강의실 2개, 세미나실, 시청각실, 자료실로 구성되었다. 5·18교육의 필요성과 공간의 확보라는 문제의식을 현실화했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5·18교육관의 조성과 구성 내용은 5·18을 의제로 하는 ‘공간의 정치(politics of space)’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기념공간의 표상 담론과 교육의 외현 : 5·18묘지를 중심으로

1) 5·18의 성격 규정과 표상 담론의 전환

‘5·18민주화운동’은 2006년 3월 이후부터 정의된 것이다. 1995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3월 24일까지는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이 혼용되었다. 법률로 보면, ‘광주’를 ‘5·18’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지만, 사건의 성격과 대상의 규정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5·18의 성격 규정에 대한 5·18관련단체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등이 제기한 다양한 주장들의 일부를 수용한 것이었다. 두 용

28) 『광주드림』, “반쪽짜리 오월교육사업.” 2009.7.14.

29) 교육관 건립은 2009년 12월 4일에 건립공사 공고, 12월 10일에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어가 5·18의 성격을 둘러싼 법률의 정의에 따른 차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차이는 제도와 비제도 영역 사이에 그리고 비제도 영역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 5·18의 성격과 의미 규정은 사람들과 집단에 따라 편차가 컸고, 사건이 재구성되면서 변화했다. 5·18의 성격과 정의는 일정하게 통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는 5·18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용어들은 배척한다는데 합의가 되어 있었으나, 일상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5·18기념공간들은 5·18에 대한 성격 규정과 담론들이 투영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5·18기념공간들에 투사된 의미와 상징 그리고 담론은 나름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각 공간들의 개념 부여와 차별화는 5·18묘지의 조성이 추진되던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는 기념사업이 진행되면서 바뀌기도 했으나, 대강의 구조와 내용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재현의 내용과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기념공간이 5·18묘지이다. 5·18묘지의 시설들에 5·18민주화운동(공식 안내판, 참배단의 참배요령 안내문)과 5·18민중항쟁(민주의 문 내부 전시물, 추모탑, 행방불명자 묘역)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묘지를 둘러싼 기억투쟁의 흔적이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5·18의 정의와 성격 규정에 대한 의견 차이와 입장들을 5·18묘지를 통해 독해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5·18묘지의 공식 안내판의 안내문에서 잘 보여진다. 안내문에는 시설에 관한 가장 압축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며, 따라서 시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안내문은 기념공간에 기록된 그 어떤 문구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되며,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속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참배와 탐방은 이 안내문을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방문객이 안내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로 기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안내문의 내용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는데, 연구자와 안내자들도 이를 심각하게 고찰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다음의 <표>가 보여주듯이, 5·18묘지 안내문은 특정 시점에 바뀌었다. 안내문은 최소 2회 이상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 안내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1월 30일 이후에 설치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조성된 모든 집단묘지들이 기존의 국립묘지들과 통합 관리되었고,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안내문이 변경되었던 것이다.

두 종류의 안내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후자의 글이 전자보다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완화된 표현으로 바뀌었다. 둘째, 전자에서는 ‘광주민중항쟁’으로 정의했으나, 후자에서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의와 일치시켰다. 셋째, 안장 대상자들과 관련하여, 전자는 사망과 부상 등을 포함하여 ‘희생되신 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후자는 희생과 부상 그리고 구급 후 사망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5·18 관련자의 보상에서 적용된 피해의 양상에 따른 분류를 준용한 것이다. 넷째, 묘지의 기원과 관련하여 보면, 전자는 ‘5·18구묘지’에 안장된 유해가 먼저 이장되었고, 이어서 다른 곳에 안장되었던 유해들이 이장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후자는 ‘5·18구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유해들만 이장한 것처럼 오독될 여지가 있다. 다섯째, 5·18 유공자들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사건의 의의와 관련하여, 전자는 은유적이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불의와 독재를 극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의를 구체화했으나, 동시에 축소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전자가 장엄한 서사적 구조를 띠고 있는 반면, 후자는

역사교육의 장과 민주성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화하고 있다. 여덟째, 관리 주체와 관련하여, 전자는 국가보훈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후자는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다.

〈표〉 국립5·18민주묘지의 공식 안내문과 변화

확인 시기	2005년 11월	2010년 5월
안내문	<p>여기 국립5·18묘지는 1980년 광주민주민중항쟁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산화하신 분들과 부상 등 희생되신 분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p> <p>1994년부터 시작한 5·18묘지 성역화사업이 3년만에 완공되어,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저 뒤쪽 산기슭(시립묘지3묘역, 5·18구묘지)에 묻혀 저 세상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던 분들부터 여기에 안장했습니다.</p> <p>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여 온 5·18묘지가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 7. 27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p> <p>앞으로도 그 때 함께 싸웠던 분들이 계속 묻혀 그 분들의 거룩한 정신이 여기 우뚝 선 탑 위에 장엄한 불꽃으로 솟아 우리 민족과 세계인의 가슴 속에 널리 번져 나갈 것입니다.</p> <p>2002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장</p>	<p>여기 국립5·18민주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당시 부상을 당하였거나 구금되어 고문과 옥고를 치른 후 사망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p> <p>1994년부터 시작한 5·18묘지 성역화사업이 3년만에 완공되어(1994~1997),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5·18구묘지(광주시립묘지 3묘역)에 묻혀야 했던 분들을 이 곳에 모셔와 안장하였습니다.</p> <p>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여 온 5·18묘지가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 7. 27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p> <p>이 곳 국립5·18민주묘지는 다시는 불의와 독재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 우리민족과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한 민주성지로 기억될 것입니다.</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5·18묘지에 대한 공식 정의와 담론은 전자에 비해 후자에서 제도와 법률의 규정성이 강화되었으며, 감정의 표현 수위가 정제되고 완곡한 용어들로 대체되었다. 5·18의 성격과 의미는 구체화되면서 동시에 축소되었고, 안장 대상자의 특성을 보상법의

적용에 의거해 세분화했다. 그리고 이 묘지가 마치 망월묘지를 그리고 망월묘지만을 대체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5·18에 대한 시대적 정의와 담론이 변화하는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 내의 통상적 추모문화와 담론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내문에서 볼 수 있는 5·18의 정의와 담론의 변화는 전시실을 대체한 추모관의 전시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역사의 문’ 지하의 전시실은 5·18의 진상을 널리 알리는데 강조점을 둔 공간적 구성이 특징이다. 그래서 전시실이 처음 개관될 당시에는 관람객의 연령과 여러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처참한 시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얼마 후 이 사진들은 방문객의 연령과 조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관람을 제한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런데 신축한 추모관 내 전시실의 재현과 전시물은 이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사실(fact)과 진상의 알림과 전달에 역점을 두었던 지난 전시실과 달리, 다양한 문화·예술적 재현을 통해 표현했고, 사건의 내용은 추상화되었으며, 5·18을 구성하는 주요 사건과 장소 등은 모형과 다양한 기법들로 재현되었다. 반면에 기존의 전시실에서 강력하고 충격적인 인상을 주던 시신의 사진들은 전시대상에서 배제되었다.

2) 5·18묘지의 참배 문화와 교육의 지향 : ‘도열’의 표상과 국가화

5·18기념공간들 가운데 5·18묘지의 방문객이 다수를 점하는 것은 단체 방문이 이곳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단체 방문은 첫째,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각종 행정 기관원의 참배, 둘째,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셋째, 대학생·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등의 참배와 답사가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단체 방문은 관리사무소에 방문 일정을

사전에 알리고, 예정 시간을 협의한다. 특정 시간대에 방문객이 집중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을 예방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이지만, 불편한 정치·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집단들이 동시간대에 묘지에 머무르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관리사무소는 ‘민주의 문’에 당일의 단체 방문 일정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다른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단체 방문에 수반되는 여러 절차들의 진행을 대비한다.

관리사무소와 협의한 단체 방문은 관례화된 ‘참배 절차’에 따라 참배와 이동을 하게 된다. 관리사무소가 제시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단체 방문의 일정을 협의했다는 것은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는데 사실상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 단체 방문의 두드러진 표상은 ‘도열’로 나타난다. 도열은 도입 공간인 ‘민주의 문’을 지나 ‘민주광장’에서 준비된다. 이곳에서 형성된 대열은 5·18민주항쟁추모탑 앞 참배단까지 대형을 유지한 채 이동하고, 헌화·분향·경례·묵념 등의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단체 방문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열을 이탈한 행동과 참배는 용이하지 않다. 대열을 이룬 단체의 이동과 의례는 개인 참배 혹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집단 참배와 대조적인 참배 문화를 보여준다. 제도화된 참배 절차를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질서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화적 기원으로 보면, 이 절차는 국민국가의 영웅 숭배 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참배 문화가 식민지시대에 신도와 전몰자의 추모 문화 등으로 변용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마치 보편적인 근대 문화인 것처럼 인식되어 재활용되었다. 그리하여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전개되었던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독립 및 전쟁 영웅들에 대한 제도적 추모 문화의 정립 과정에서도 명맥을 이어 유사한 형태로 부활했다.

제도화된 참배 문화는 단체 참배객, 특히 수학여행의 일환으로 참배한 학생들에게 기존의 국립묘지들과의 인식론적 차이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갖게 한다. 학생들이 묘지의 다른 시설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집단 방문의 대다수, 특히 학생들의 단체 방문은 참배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아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당초에 쉽지 않다. 묘지가 표상하는 엄숙과 숙연은 그 공간을 조성하게 된 목적과 이유의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반면, 여하의 국립묘지들과 동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5·18교육의 기능마저도 제도 내로 협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된 참배 문화는 5·18교육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와 과정이 굴절될 개연성을 잘 보여준다.

지방정부가 5·18묘지의 관리 주체였던 시기에는 이러한 참배 문화의 적용과 강박증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이에 따라 관리 주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면서 정형화된 국가 의례적 추모문화가 여과와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관철되었다. 묘지에 올리는 조곡도 이러한 변화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묘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한동안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요 배경 음악이었던 ‘백학’이 조곡으로 흘렀다. 이 음악은 신군부가 시민사회에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 등을 잘 보여주는 12·12군사반란과 5·18 그리고 삼청교육대 사건 등을 직접 연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잔잔하고 애잔한 조곡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국립묘지들과 다른 감성적 호소에 의거한 차이를 상쇄시켰다.

5. 맺음말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 작업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수준에서의 과거사 청산이 가해 주체들에게 사법적 혹은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낮은 수준에서의 과거사 청산은 사건의 재조사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과거사 청산 작업의 결과가 외화 되는 형태는 사건과 상황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데, 진상규명에서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규명된 진상에 의거하여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그리고 기념사업 또는 추모사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거사 청산의 결과를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미치지 못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안목과 문제의식은 청산 작업이 안정화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제도적 합의와 절차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야 비로소 형성되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교육은 부차적인 과제로 또는 추후에 수행되어야 할 영속적인 과제로 남겨놓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5·18교육은 과거사 청산의 결과물이 어떻게 교육, 특히 제도 교육의 영역에 편입 및 재편되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발발한지 불과 8년 만에 5·18의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정치·사회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사회적 저항과 압력이 크게 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5·18의 청산 작업이 시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은 5·18의 청산 작업을 억제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구조와 반발을 제어하고 시민적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5월운동과 사회운동을 매개로 한 더 많은 힘의 결집과 분출이 필요했던 것이다. 5·18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안목은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형성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5·18교육은 이 사건이 발발한 직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5·18에 대한 국가의 담론 또는 공식 담론을 부정하고, 이를 대체할 진상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5·18교육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방법, 언론 및 방송 매체들에 의한 방법, 그리고 다종의 집합행동과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5·18의 현장과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문 및 답사 등으로 이어졌고, 5·18을 주제로 한 각종 의례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한층 발전하고 있었다.

제도적 차원에서 5·18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렴하고, 이를 수행한 주요 주체들은 재단과 대학이었다. 재단은 교사 집단들과 연대하여 청소년 교육에 주로 역점을 두었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5·18교육을 진행했다. 반면 대학에서는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다. 재단에서 5·18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안목이 싹을 틔운 것은 1996년부터였지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임박했던 2001년부터였다. 재단이 5·18교육이 구조를 갖추고, 자리를 잡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재단의 5·18교육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서 다양한 교재의 개발과 공교육 내의 안착으로 점차 중심을 이동했다. 한편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등 5·18교육의 안정화와 지속화를 모색하고 있다.

5·18교육과 기념공간들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이 기념공간들을 구상하고 조성하던 시기에도 5·18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교육과 공간의 관계를 ‘집중형’으로 판단함으로 인해 다른 개념들이 부여된 공간들에서는 교육의 안목이 결여되어 있었다.³⁰⁾ 더욱이 교육의 개념으로 구상된 기념공간의 건립이 지연되면서 이 문제의 해결과 요구에 대한 압박이 확대되

었다. 그러자 5·18교육의 안목은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재정립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시설들의 보완과 건립 등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공간에서 5·18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과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한편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기념공간, 특히 5·18묘지의 대표 담론은 제도와 법률의 정의와 성격 규정에 갈수록 일체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5·18의 원초적인 모습과 사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문화·예술적 재현과 완곡한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5·18이 제도 내에 안착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통과의례일 수 있으나, 동시에 사회운동의 특성과 지향에서 멀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5·18묘지에서 단체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참배 문화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화가 진행되었음을 표상하는데, 이는 5·18묘지의 차별성과 의미화에 대한 공감과 인식을 희석화 또는 반감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사 작업에 관한 교육은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¹⁾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사 청산 작업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재고시킴으로서 보다 사실에 근접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근래에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 작업의 결과 보고서들에 수록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대부분 이것의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교육은 과거사라는 인식적 구속과 회고적 시선을 현재와 미래의 의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과거사의 재인식과 사실의 전달 수준을 넘어서 과거사가 발생하게 되었던 정치·사회적 조건과 배경 등을 성찰하고, 이것이 현재 그리고

30) ‘하드웨어의 건설에 치중하고, 이 시설의 활용에 관한 운용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와 ‘기념의 내용이 불분명했다’ 등과 같은 평가들(정근식 2002, 33)은 바로 교육의 안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이에 관한 문제의식은 심사자의 논평으로부터 도출된 것임을 밝힌다.

미래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를 학습하며, 다양한 실천으로 표출하는 것 전반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인식의 수준과 바탕이 다르기도 하다. 과거사 청산과 그 결과에 대한 교육의 안목 및 문제의식에 대비하여 이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사 청산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욱 가치를 발하고 사회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장치 그리고 구조의 정착이 이루어질 때인데, 이는 과거사 청산 작업의 초기부터 속고를 필요로 한다.

(2010년 10월 14일 접수, 2010년 11월 21일 게재)

참고문헌

- 5·18기념재단. 1998.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후원회 자료집>.
- 5·18기념재단. 1999.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총회(후원회) 자료집>.
- 5·18기념재단. 2000. <2000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자료>.
- 5·18기념재단. 2002. <2002년도 제1차 이사회>.
- 5·18기념재단. 2003. <2003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자료>.
- 5·18기념재단. 2004. 『5·18청소년교육사업의 평가와 제안』.
- 5·18기념재단. 2006. 『5·18자유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 5·18기념재단. 2007. 『5·18기념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리모델링 연구』.
- 5·18기념재단. 2010. <5·18기념재단 소개 리플릿>.
-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1996. 『5·18기념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종합보고

서」.

- 광주광역시. 1995.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
- 광주광역시. 2004.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종합기본계획(요약 보고서)』.
- 구승희. 1993. “나치 역사 평가를 둘러싼 독일학계의 논쟁.” 『역사비평』. 22.
- 국가보훈처. 2006. 『국립5·18민주묘지 장기발전 방안』.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2007. 『국립5·18민주묘지 10년사』.
- 김광남. 2009. 『한국 근·현대사』. (주)두산.
- 김남철. 2010. “5·18교육, 어떻게 해왔는가.”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5·18교육대토론회 자료집』. 5·18기념재단 외.
- 김영수. 2008. 『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메이데이.
- 김유경. 2002. “국민국가의 집단기억과 역사교육·역사교과서.” 『창작과 비평』. 115.
- 김호수. 1999. “박물관과 역사교육.” 『실학사상연구 - 한국사교육논총』. 13.
- 김효석. 2001. “5·18민중항쟁 청소년 교육교재내용과 실천방안.” 『5·18민중항쟁 공교육 방안모색 공청회 자료집』. 5·18민중항쟁 청소년교육위원회.
- 나간채·강현아 편. 2002. 『5·18항쟁의 이해』. 광주광역시.
- 나간채. 2008. “5월운동의 진전과 그 성과.” 『5·18 그리고 역사』. 길.
- 류현중. 2005. “역사적 장소 학습과 과거 기억의 문제 - 초등학교생들의 역사적 장소 재현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2. 한국역사교육학회.
- 박원순. 1993. “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역사비평』. 22.
- 박원순. 1994. “동경전범 재판, 그 능욕과 망각의 역사.” 『역사비평』. 28.
- 박원순. 1995.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역사비평』. 32.
- 박원순. 1996. “역사바로세우기와 특별법 제정 - 프랑스 과거청산의 교훈.” 『역사비평』. 34.
- 박현채·조희연 편. 1989. 『한국사회구성체논쟁(I)』. 죽산.
- 심성보. 2010. “5·18교육, 무엇을 말하는가.”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5·18교육대토론회 자료집』. 5·18기념재단 외.

- 안병직 외. 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 역사.
- 안종철. 2001. “5·18자료 및 연구 현황.”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18
 사료편찬위원회.
- 양호환 외. 2009.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 함께.
- 양호환. 2010. “집단지역,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 역사교육연구
 회.
- 이내영·박은홍. 2004.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아연출판부.
- 이용우. 2007.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역사비평사.
- 이재현. 1991. ‘독서유형으로 본 학생운동 풍속도.’ 『말』. 11월호.
- 이효춘. 2007. ‘우리에게겐 기억하고 가르쳐야 할 역사가 있다, 5월!’ 『역사교육』.
 77. 전국역사교사모임.
- 장수한. 1994.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서독의 자본주의.” 『역사비평』. 28.
- 장용준 외. 2008. 『중·고등학생용 5·18민주화운동』. 5·18기념재단.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8.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 정근식. 2002. “5월운동과 비엔날레: 문화예술적 장으로서의 5·18기념공간의
 가능성.” 『기억·장소·축제』. (재)광주비엔날레·(재)5·18기념재단.
- 정근식. 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97. 역사교육연
 구회.
- 정남석 외. 2008. 『초등학생용 5·18민주화운동』. 5·18기념재단.
- 정현백. 1996. “실패한 새로운 시작.” 『창작과 비평』. 93.
- 조희연. 2009. “‘급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광주 5·18.” 『5·18민중항쟁에 대
 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 최영태 외. 2008. 『5·18 그리고 역사』. 길.
- 최영태. 2010. “5·18의 기억과 교육.”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
 회 자료집 ①』. 5·18연구소·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
- 최호근. 2005. “이스라엘의 역사교육과 홀로코스트.” 『역사교육논집』. 34.
- 최호근. 2009. 『독일의 역사교육』. 대교출판.

- 허연식. 2002. “5·18기념사업에 대한 반성과 전망.” 『기억·장소·축제』. (제)광주비엔날레·(제)5·18기념재단.
- Assmann, Aleida. 1999. *Erinnerungsräume*. Verlag C. H. Beck München. (번학수·백설자·채연숙 역. 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 Bourdieu, Pierre et Passeron, Jean-Claude. 1970. *La Reproduction*. Les Éditions de Minuit. (이상울 역. 2000. 『재생산』. 동문선)
- Cohen, Stanley. 2001. *States of Denial: Knowing about Atrocities and Suffering*. (조효제 옮김. 2000.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창비)
- Cole, Elizabeth A. 김원중 옮김. 2010. 『과거사청산과 역사교육』. 동북아역사재단.
- Hirsch, Herber. 1995.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강성현 옮김. 2009.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책세상)
- LaCapra, Dominick. 육영수 엮음. 2008. 『치유의 역사학으로』. 푸른 역사.
- Wineburg, Sam. 2001, *Historical Thinking and Unnatural Acts*, Temple University. (한철호 옮김. 2007. 『역사적 사고와 역사교육』. 책과 함께)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Historical Events and Establishment of Necessary Schemes and Commemorative Spaces

Ho-Gi Jung

Pursuit of a realistic approach to weaving a social fabric that accurately informs the public of recent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sheds new light on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is study addresses a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nd process from which a perspective on education on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has been structuralized and institutionalized based on recognition by the principal parties and creation of related schemes. This study also delves into the implications of education incorporated into creation and operation of commemorative spaces about important historical events as well as major discourses and ceremonial emblem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recognized after substantial headway was made in determining the facts of the incident. This indicates a great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previously non-institutionalized education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Major parties overseeing such education are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s and universities, which have made progress in fulfilling their respective objectives. Commemorative spaces inseparable from education were originally designed and created amid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is prompted redefinition of the concepts and functions of these spaces, which in turn led to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and renovation of old ones. From the standpoint of education, a review of major discussions and memorial rites concerning National

Cemetery fo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shows that institutionalization and nationalization are now substantially complete.

Key words : the clarification of the past,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education, institution, commemorative spaces

